

1/ 메이지 일본 경제발전의 ‘복층성’(複層性)

‘근대’ 대(對) ‘재래’의 이원론을 넘어서*

다니모토 마사유키



출처: 横山源之助, 『日本之下層社会』(1899年 刊行) 第5章・鉄工場.

다니모토 마사유키(谷本雅之) 도쿄대학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교수, 박사(도쿄대학 경제학). 전공은 일본경제사, 비교경제사로 18~20세기 일본의 산업사·노동사에 관한 논고가 많다. 최근에는 가사 노동과 소비행동의 관계, 근세사회의 공공재공급의 비교사적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日本における在来的經濟發展と織物業』(名古屋大学出版会, 1998, 第41回日経・経済図書文化賞), 『日本經濟史: 近世から現代まで』(有斐閣, 2016, 沢井実と共著), 편저로 *The Role of Tradition in Japan's Industrialization*(Oxford University Press, 2006) 등이 있다.

<https://doi.org/10.29154/ILBI.2018.19.014>

1. 들어가며

‘동아시아의 봉건사회’였던 일본이 ‘근대성’과 만나 어떻게 반응·수용·길항했는가? 본 특집에서 다루는 이 공통된 물음에 이 글은 막말 개항과 메이지 유신을 거쳐 새로운 경제성장을 출발시킨 일본에서, 서구의 산업기술과 제도를 체현한 이른바 ‘근대산업 부문’과 근세 소농사회에서 싹터 그 구조적인 특질을 계승한 ‘재래부문’이 어떠한 상호관계 속에서 메이지 일본의 경제발전을 특징지었는가를 검토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려 한다.

GDP에 관한 최신 역사 추계(推計)에서는, 일본의 1인당 GDP 성장률이 메이지 전기인 1874~1890년 연율 0.9%, 그리고 메이지 중후기인 1890~1913년 1.2%로, 막번체제하인 1804~1846년의 0.2%는 물론이고 막말 개항 이후를 포함한 1846~1874년 0.4%보다도 높다.¹ 또 인구증가율은 1885~1913년 사이에 연율 1.08%를 기록하여 1721~1846년의 0.02%, 1846~1881년의 0.4% 전후를 크게 웃돌았기에 메이지 유신 후의 GDP 총액 신장률의 상승은 한층 현저했다.² 분명 메이지 유신은 ‘근대 경제성장’의 기점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추계는 연구사적으로 볼 때 1874년의 GDP가 종래의 추계치보다도 상당히 컸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메이지 유신 후의 경제성장률은 종래보다 수치가 약간 낮아졌고, 한편 메이지 유신 이전에도 1인당 GDP로 표시되는 경제 수준은 착실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음을 명시해 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활발해진 에도시대에 관한 수량적 분석에 기반을 두는 경제사 연구의 성과를 추인하는 것이기도 했다.³ 막번체제하의 경제는 결코 ‘봉건제하’에서의 ‘정체’ 일색만은 아니었다.

1 深尾京司·中村尚史·中林真幸編, 『日本經濟の歴史3 近代1』, 岩波書店, 2017.

2 斎藤修, 尾高煌之助·山本有造編, 「人口變動における西と東」, 『数量經濟史論集4·幕末·明治の日本經濟』, 日本經濟新聞社, 1988.

3 速水融·宮本又郎編, 『日本經濟史1·經濟社會の成立』, 岩波書店, 1988; 新保博·斎藤修編, 『日本經濟史2·近代成長の胎動』, 岩波書店, 1989 등.

그렇다면 메이지 이래의 성장 가속과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경제발전의 태동, 이 두 가지 사실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에도시대 후기의 경제발전을 메이지기에 본격화하는 근대적 경제성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채용한다면 경제발전의 양적 달성도만이 메이지기 일본경제의 ‘근대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 구체적인 지표로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서구제국의 1인당 GDP와의 거리일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다이쇼 초기)인 1913년의 실태를 보면, 일본과 영국과의 1인당 GDP 격차는 약 3배, 프랑스나 독일과는 2배 정도였다. 1874년에 비하면 공업화의 최선진국 영국과의 차는 어느 정도 좁혀졌음에도 후발주자인 프랑스, 독일과의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것을 착실한 추격으로 볼 것인지, 메이지기 경제의 한계라고 볼 것인지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경제근대화의 길 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에도시대 후반, 특히 1800년경부터의 경제성장을, 근세 소농사회에서 싹터 그 구조적인 특질을 계승하는 경제발전(‘재래적 경제발전’)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창하는 바이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술 도입을 기동력으로 하는 ‘근대적 경제발전’은 ‘재래적 발전’을 대체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위에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총체로서 메이지기의 경제발전은 ‘복층적 발전’이라 불러야 할 특질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메이지기의 경제발전을 이 ‘복층성’의 시각에서 ‘근대성’과 ‘재래성’의 하이브리드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파악하는 일이 근대 일본의 경제사회를 이해하는 데 유효함을 논하고자 한다. 이하 제1장에서는 메이지기의 산업발전의 ‘복층성’을 리딩(leading) 산업이었던 면공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산업 발전의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의 존재 형태와 공급 구조라는 시각에서 ‘근대성’과 ‘재래성’의 관계성을 논한다. 제3장에서는 ‘근대성’의 선두에 서는 중앙 정부·대도시부와 대비되는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재래적’ 경제사회 모습을 찾아내고, 지리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근대’와 ‘재래’의 복층성을 보이게 한다.⁴

2. 산업의 복층적 발전: 면공업을 중심으로

1) 공업 발전의 복층성: 개관

일본의 공업화 과정에서 서구형 공장제 공업 형태의 직접적인 이식이 시도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선진공업국 따라잡기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세운 메이지 정부에 있어 경제근대화란, 곧 서구에서 발전하고 있는 공장제 공업을 이식하고 그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했다. 1870년대 전반, 메이지 정부는 병기, 조선 등 군사적 색채가 강한 산업뿐 아니라 방직, 제사, 시멘트, 유리, 맥주 등 민수 관련 제반 산업에서도 관영 공장을 잇달아 설립했다. 거기에는 유럽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한 기계설비가 설치되고, 높은 급료를 주고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숙련공이 공장에 모인 일본인에게 기술과 기능을 전달했다. 이러한 관영공장 대부분은 1880년대에 차례로 민간에 매각되는데, 미쓰비시(三菱)의 나가사키(長崎)조선소나 가와사키(川崎)의 효고(兵庫)조선소와 같이 공장 경영 자체는 민간 자본에 의해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해 간다.

한편, 군사적 이유로 국영 형태가 유지된 병기공장은 이후로도 최대의 기계공장 지위를 유지하였고 20세기 초두에는 일본 최대의 제철소(八幡製鐵所)가 관영으로 조업을 개시했다. 정부가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부담한 사업체는 분명 서구 선진공업국의 기술·생산 형태의 이식에 의한 경제근대화를 전형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같은 공업화 모습을 시작 시점부터 민간 자본에 의해 실현한 사례가 바로 기계제 면사방직업이다. 민간방직 회사의 선두주자가 된 오사카 방직 회사는 1883년 조업 초기 단계에서 이미 1만 추를 넘는 규모였으며, 처음으로 경영적인 성공을 거둔 방직 회사가 되었다. 이후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에 걸쳐 수만추 규모의 방직기계를 갖춘 방직 회사가 잇달아 설립되면서 수입면방직사(영국산·

4 이하 이 글의 주요 부분은, 沢井実·谷本雅之, 『日本經濟史: 近世から現代まで』, 有斐閣, 2016에서 谷本가 담당한 제2장 제3, 4절 및 제3장 제1, 3, 7절의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사실 근거의 주기를 생략한 부분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문헌을 참조한다.

〈표 1〉 공업유업자수와 공장노동자수(1909년)

	공업유업자	비공장	민간공장			관영공장	
	계	계	계	5~9명	1000명 이상	계	1000명 이상
남(명)	2,030,600	1,630,586	307,139	66,275	30,537	92,875	81,466
여(명)	1,306,500	788,618	493,498	42,141	80,742	24,384	23,528
계(명)	3,337,100	2,419,204	800,637	108,416	111,279	117,259	104,994
여성비율(%)	39.2	32.6	61.6	38.9	72.6	21.0	22.4

출처: 공장은 農商務大臣官房文書課(1911), 광공업유업자는 梅村他(1988), 205쪽.

인도산)를 국내 시장에서 몰아내고 이미 1890년대 후반에는 수출시장(주로 조선 및 중국)으로 그 판로를 확대했다. 1870년대까지의 면사생산은 농가부업에 의한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사방적업에서의 공장생산 정착은 근세 이래의 산업발전과는 명백한 ‘단절’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적인 서구형 공장제 공업의 이식은 공업생산의 발전 속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지녔던 것일까? 〈표 1〉의 내용과 같이 1909년의 공업(=제조업) 유업자 수는 333.7만 명이었다. 반면 관영공장 및 취업자 5명 이상의 민간공장의 종업원 수는 약 92만 명이었으니, 대략 공업유업자의 70%는 공장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소규모 작업장을 생산 현장으로 이용했다는 뜻이다. 그 대극(對極)에 있는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공장의 종업자수는 민간·관영 합해서 21.6만 명, 공업유업자의 약 6.5%였다.

2) 재래면직물업의 지속적 전개

산업혁명을 이끈 면공업 분야에서도 직포 분야(직물업)로 시야를 넓히면 생산 형태의 다양성이 드러난다. 농촌공업의 형태로 근세 후기 이래 생산을 늘려왔던 재래면직물업은, 1859년 개항—자유무역의 개시—에 의해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및 식민지 인도) 면공업과 대치했다. 기계제 공업으로 만들어진 이들 수입 면사가 ‘고품질과 상대적 저가격을 무기로 일본 시장을 석권하고 수공업 단계의 일본 면공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 경제사의 전통적 해석으로, 실제로 수방사(手紡絲)생산은 명백히 쇠퇴하였으며 본격

적인 수입의 대체는 전술한 기계제 방적 공장의 등장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면직물업에 관해서 사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나카무라 사토루(中村哲)의 추계에 의하면, 1874년 시점에서 국내 면포 수요에 차지하는 수입 면포의 비율은 약 40%에 달했는데, 그 점유율은 그 후 이 수준을 웃도는 일이 없었다.⁵ 면포 수입이 정체하는 가운데 국내 생산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담당한 것이 농촌공업의 계보를 잇는 재래 면직물 생산지였다. 직포생산을 맡아 하던 것은 농가 내의 여성 노동력이었으며 직포작업은 농가의 부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기계는 수동 베틀(高機)이었다. 즉, 기계제 공장에서 생산된 영국면포의 수입 대체가, 소농경영에 기반을 둔 수공업적 생산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것이 가능해진 요인에 대해서는 의론이 분분하다. 생산 비용의 차이를 중시하는 견해에 대해, 시장경쟁의 전제가 되는 영국산 면포와 일본산 면포의 대체성 여부도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새로운 중간재인 기계제 방적사의 도입이 열쇠였음은 분명하다. 수입면사에서 시작하여 1880년대 후반부터 기계제 방적공장이 발흥한 후로는, 국산 방적사가 원료가 되어 코스트다운이 진행되었다. 개항 이래 일본의 면공업은 서구 기술·제도의 이식·정착을 특징으로 하는 방적업, 상인활동과 소농경영의 결합으로 전개되어 온 재래면직물업이라는 크게 다른 생산 형태를 병존시키게 된 것이다. 메이지 후기에는 직물업에서도 수입 역직기(力織機)를 갖춘 면직물공장(주로 방적 회사의 겸영)이 출현하지만, 조선·중국 수출용 광폭 무명(廣幅白木綿)[옥양목(金巾)·조포(粗布)]의 생산에 그치고 있으며 생산량도 재래면직물 생산지를 상회하지 못했다. 실제로 직물업 종업자는 76만 명에 달해 8만 명 내외의 방적공장노동자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으며,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그중 60만 명 이상은 직공 10명 미만 작업장의 취업자였으니(직공 10명 미만의 독립 영업과 임직업의 합계), 공장 이외의 생산 형태가 적어도 취업구조면에서는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대다수가 ‘임직’(賃織)

5 中村哲, 『明治維新の基礎構造: 日本資本主義形成の起点』, 未来社, 1968.

〈표 2〉 직물업의 생산형태(1905년)

	합계	생산형태별			
		독립영업			임직업
		공장	가내공업	오리모토(織元)	
	계	직공 10명 이상	직공 10명 미만	임직에 원료공급	오리모토의 원료공급에 의해 직포작업
호수(호)	448,609	3,097	138,833	14,370	292,309
직공수(명)	767,423	91,279	229,446	58,591	388,107
여성비율(%)	88.5	95.7	89.4	97.6	95.3
일호당직공수(명)	1.7	29.5	1.7	4.1	1.3

출처: 谷本(1998)표 II-1, 264쪽을 참고로 작성

이라 불리는 농가 세대 여성의 취업으로, 이들을 편성하여 직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리모토(織元)였다. 산업경영방법으로서 ‘돈야제’(問屋制, putting-out) 형태를 취했으며, 그 노동력 기반을 ‘가내공업’(농가내 여성 노동력)에 두었다는 점은 188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기까지 재래 면직물업의 특징이다. 이 돈야제 가내공업 형태의 채용은 재래 면직물업에서 일정한 진화를 의미했다.

돈야제는 근대 공업 형성에 선행하는 공업-프로토공업-의 전형적인 생산조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에도시대 후기의 면직물업 생산지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년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면직물업에서 이 형태가 널리 보급된 것은 188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이루마(入間)지방[현재의 사이타마(埼玉)현, 이루마(入間)시]의 면직물업⁶에서도, 농가 겸업에 의해 생산된 직물을 농촌 재주 중개상인이 매집하여 집산지의 돈야(問屋)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형태(매입제)가 메이지 초년대(1870년대)까지 주류였다. 그러나 1880년대에 들어와 중개상인 가운데 오리모토로 전환을 도모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농가에서 짜서 완성한 직물을 집하하는 것뿐 아

6 이루마의 직물업에 관한 사실은 谷本雅之, 『日本における在来的經濟發展と織物業: 市場形成と家族經濟』, 名古屋大学出版会, 1998, 제II부에 의거함.

나라 원료 공급과 제품 집하를 결합시키는 방식, 즉 시내의 면사장에서 방적사(당초는 수입면사, 후에 국산기계제 방적사)를 사들여 염색집에서 염색을 가공한 뒤 낱실을 정경(整經, 일정한 길이의 낱실을 필요한 수만큼 가지런히 펴서 도투마리에 감는 일—역자주)하고, 염색이 끝난 씨실과 함께 농가—임직—에 건네는 방식이 널리 채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환을 촉진한 것은 제품시장에서의 경쟁이었다. 고가의 수입 역직기에 의한 코스트다운이 현실적이지 못한 가운데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 공급이 불가결하다. 그 국면에서 원료사 공급을 기반으로 하는 돈야제는 통일된 원료사 사용을 통해 제품 품질의 향상을 추구한다. 나아가 시장정보에 더 밀접하게 접촉하는 오리모토가 염색, 정경이 끝난 원료사 공급을 통해 잘 팔리는 제품의 기획·발주·집하를 행함으로써, 수요가 고도화됨에 따라 요구되는 감촉과 디자인을 둘러싼 경쟁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돈야제는 명백히 새로운 시장조건의 대응으로서 도입·정착된 생산조직이었다.

그렇다면 돈야제하에서 오리모토-임직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농가부업이라는 것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생산의 계절성이다. 이루마 지방의 경우 맥작, 제차(製茶) 및 양잠(蠶桑)이 겹치는 농번기인 5·6월부터 여름에 걸쳐 제직 부문으로의 노동 공급이 대폭 감소했다. 한편 직물 수요측은 이루마 지방산 직물을 겨울용으로 주문하고 있었고, 출하는 가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제품 수요와 노동 공급에 시차가 있음을 뜻한다. 노동 공급측 제약에 의해 최적의 생산시기—판매 성수기를 앞둔 봄부터 여름—에 제직작업을 하는 것이 곤란했던 것이다. 재고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미리 농한기에 제직을 발주하여, 그 시간 간격을 메우는 주체가 된 것이 오리모토였다. 그 존재 없이는 농촌 부업과 직물 수요가 결부될 수 없었다. 돈야제의 채용과 그 존속은, 제품시장과 노동시장 쌍방 요청에 대한 오리모토의 적응 행동이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리모토의 경영은 지역의 핵이 되는 시내에 집적하는 원료·제품상인과 염색업자, 금융기관과 동업조합, 실업교육기관의 활동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것은 생산의 지리적·일반적인 집중과는

구별되는 ‘산지’(産地) 형성의 과정이었다. 소농경영과 상인의 결합으로 수행된 면직물업은 ‘산지’의 형성·발전으로 뒷받침되면서, 기계제 공장화와는 구별되는 경제발전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 이루마 면직물업의 전개과정은 ‘재래적 경제발전’을 성립시키고 있는 구성요소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직포 노동의 주된 노동력의 공급원이 농가 세대 내에 존재하는 여성 노동력이었다는 점이다. 그 배후에는 소농경영과 공업발전의 결합이 존재했다. 다음 제2장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메이지기 경제발전에서 나타나는 노동 공급의 특질을 정리한다. 또 하나는 오리모토의 기능에서 보이는, 농촌을 포함한 지역사회 ‘자본’의 존재와 그 기능이다. 제3장에서는 자본의 구체적인 존재 형태로서의 ‘자산가’ 행동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의 지속적 전개의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노동력 공급의 특질

1) 농가 세대와 노동력

1880년대 이래의 공업화를 기동력으로 하는 경제발전하에서 비농림업 인구는 1880년부터 1910년에 걸쳐 1.55배의 증가를 보였다. 유업(有業) 인구 비에서도 비 농림업은 약 30%에서 44% 정도까지 구성비가 증대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농림업 부문 노동력의 명료한 축소를 동반한 것은 아니었다. 농림업 인구는 1880년 1,470만 명에서 1910년 1,417만 명까지 약간 감소하는 데 그쳤고, 농가호수는 1880년 550만 호에서 90년에 545만 호로 바닥을 친 뒤 더 감소함이 없이 1910년까지 552만 호를 유지했다.⁷

그렇다면 왜 공업화가 진전되는 중에도 농가 수의 감소를 동반하는 것과 같은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하는 노동력의 주요 공급원이 된 것은 농가 세대였으며,

7 梅村又次他, 『長期經濟統計2 勞働力』, 東洋經濟新報社, 1988, 199쪽, 216~221쪽.

그 경우 비농업 부문으로의 이동예정자도 우선은 농가 세대의 구성원이었다. 이 경우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한정하지 않는다면, 비농업으로의 이동의 특질을 이해하는 데에 재차 노동 공급측의 사정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하에서 보듯이, 실제로 근대 일본의 농가 세대는 노동력의 배분·공급에 있어서 고유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존재였다. 근세 일본에서 토지소지, 농업 경영, 거기에 선조 제사권을 일체로 하여 장남에게 상속시키는 ‘이에’(家)시스템이 18세기 초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성립·보급되었다. 당시 성립한 단독상속 관행은 가고시마(鹿兒島) 지방 등 일부 분할상속이 주류인 지역을 제외하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일본열도에서 기본적으로 견지되고 있다.⁸ 이 제도에서 이념적으로는 기존 농가를 계승하는 것은 상속자 1명과 그 배우자, 합계 2명이며, 그 이외의 자녀는 기존 농가 외부로 내보내게 된다. 이러한 상정은 실제의 노동이동 데이터와도 어느 정도 정합되는 측면이 있다. 20세기 초의 합계특수출생률(농민부부가 생에 낳는 자녀)과 사망률은 생산 연령에 이르는 자녀의 수가 농가 평균 4명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거기에서 대를 잇는 자(부부 2명)를 뺀 2명이 매 30년이라 가정하는 세대 교대 시기에 농가를 떠난다고 한다면, 550만 호의 농가에서 비계승자로 1년에 농촌에서 배출되는 사람 수($550\text{만호} \times 2 \times 1/30$)와 당시 농촌의 자연 인구 증가수(인구 3000만 명 $\times$ 자연증가율 0.013)의 수치가 상당히 근접하다는 계산 결과가 있다.⁹ 즉 세대 계승자의 확보와 비계승자의 농업 부문으로부터의 배출을 행동원리로 하는 농가의 주체적인 적응 행동을 상정하는 것은 매크로 인구 동태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에’가 주체가 되고, 단독상속이 ‘이에’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가산’(家産)의 계승을 의미한다고 치면, 호주라 해도 그 대에 자유롭게 땅을 처분하고 탈농화하는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안정된 장기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지주-소작 관계하에서는, 소작지에 대한 ‘경작권’의

8 坂根嘉弘, 『日本伝統社会と経済発展』, 農文協, 2011.

9 並木正吉, 「農家人口の戦後10年」, 『農業総合研究』 9卷4号, 1955.

〈표 3〉 직물농가(大阪府和泉地方)의 세대내 노동력 배분

농가번호 15 센보쿠군(泉北郡) (소자작, 1901년)				
경작면적(段)	6,493			
자작지(段)	1,327			
소작지(段)	5,137			
밭 비율(%)	14.3			
〈노동분배〉	농업	가사	기직	기타
노부(75)			△(실감기)	
노모(59)	△(농번기)	○(취사·재봉·세탁)		
남편(38)	○			△
아내(35)	△(농번기)	△(재봉·세탁)	○	
딸(14)		△(재봉·세탁)	○	
아들(11)		△(아기돌보기)		
아들(9)				
딸(5)				
딸(3)				
노동량	239.4명		540일	
생산목면 단(反)수			2160단	
증사자(概算・除臨時)	2명	2.5명	2명+α	
1인당 노동	119.7명		270일	
목면공임수입(木綿工賃 收入)(엔)	58.3			
새끼줄, 가마니 조리, 멍석대(엔)	5.5			
목면 수입비율(%)	17.8			
여업(餘業) 수입비율(%)	21.8			
수지차감	-15엔 25전			

계승으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소작농에게도 적용 가능한 논리였다. 농가의 계승과 존속 원리 위의 소농경영은 노동력과 관련된 ‘합리적’인 선택을 해나간다. 그것은 먼저 농가 세대 내의 가족노동 배분전략 형태로 나타났다.

〈표 3〉은 1900년경 오사카부 남부[이즈미(和泉) 지방]의 농촌에서 1정보 전후의 경영면적을 보유한 소자작(소작면적이 자작면적보다 넓다) 농가 및 자작농가의 가족 노동력 배분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쌍방 모두 호주(세대주)가 농업 경영을 담당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것만으

〈표 3〉 직물농가(大阪府和泉地方)의 세대내 노동력 배분(계속)

농가번호 16 센난군(泉南郡) (자작, 1899년)				
경작면적(段)	12,91			
소유지(段)	14,91	(산림 2단 포함)		
밭 비율(%)	4,0			
〈노동분배〉	농업	가사	목면	기타
노부(71)				
노모(58)		○(취사·잡일전반)	△	
남편(38)	○			△
아내(32)	○	△(재봉·세탁)	△	
남동생(24)	○			
아들(4)				
상고(常雇)(여13)		○(아기 돌보기·가사돕기)		
임시고용(남)	△(농번기)			
노동량	411명		200일	
생산목면 단(反)수			800필	
종사자(개산·除臨時)	3,5명	2,5명	1명	0,5명
1인당 노동	117,43명		100일	
목면공임수입(木棉工賃 收入)(엔)	24			
새끼줄, 가마니 조리, 명석대(엔)	6			
목면 수입비율(%)	4,19			
여업(餘業) 수입비율(%)	8,64			
수지차감	+47엔 27전			

출처: 谷本(1998) 표 4~9, 223~224쪽에서 인용

주) 노동분배의 괄호 안은 연령

로 농업 경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자작의 경우에는 농번기(파종기와 수확기)의 노동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아내’와 ‘노모’를 동원했다. 경영면적이 약 2배인 자작농 경영의 경우에는 ‘아내’(32세)와 함께 남동생(24세)의 존재가 중요했다. 농번기에는 임시고용인을 쓰기도 했는데 가족보다 그 지위는 낮았다. 경영주로서 호주의 존재와 함께, 우선 여성을 포함한 가족 노동의 동원가능성이 이 양가(兩家) 농업 경영의 요체였음이 확인되었다.

남성 호주와 호주의 남동생이 농업에 전념한 반면, 아내는 농업과 함께

가내 부업으로서 제직 작업[임직(賃織) 취업]에 종사하고 가사 노동 또한 부담했다. 농업 이외의 노동에 대해서는 호주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 간의 분담 관계도 주목된다. 소자작의 경우, 아내는 제직작업의 담당자였으나, 농번기에는 제직 노동투입이 감소했다. 그러나 ‘노모’의 존재에 의해 농업 노동을 면제받은 ‘딸’은 가사 노동 이외의 노동 시간을 모두 제직 노동에 소비할 수 있었다. 가사 노동에서도 비중이 큰 ‘취사’를 ‘노모’가 담당함으로써 ‘아내’와 ‘딸’의 분담은 경감되었다. 나아가 ‘노부’를 실감는 노동에 동원하고, 11살 아들에게도 가사 노동의 일부(아기 보기)가 할당되었다. 이처럼 단독으로 노동력화가 곤란한 노년 내지는 유년의 노동력이, 그에 적합한 가사 노동이나 보조적 노동에 동원되었으며, 거기서 창출된 여력으로 이 세대의 제직 노동 투입을 증가시켰다. 한편 딸이 없는 자작농가에서는 노모도 제직에 종사했으며 동시에 가사 노동을 담당할 젊은 여성(13세)을 고용했다. 그것으로 아내는 농업에 노동 투입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⁰

2) 여성 노동의 공급

이상으로부터 농가의 노동력 공급 논리를 생각해보자. 농가의 필요농업노동량과 세대 구성원과의 부정합은 세대 내에 연소도가 낮은 노동력을 발생시키는데, 그 정도가 방출 가능한 1인분의 노동력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계절적인 노동 수요 변동도 항시적인 과잉 노동력 발생에는 제약이 된다. 또한 가사 노동에서 보이는 비정형의 세대 내 노동 수요 존재는 과잉 노동력이 세대 내에 존재했다라도 그것을 정형적, 정량적인 농가 세대 외부의 노동 수요로 돌리는 것을 큰 손실로 여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약 하에서 세대 내 노동 수요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여성에 의한 세대 내의 ‘다취업’이었다. 근대 일본의 소농 세대는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노동의 전략적 배분을 기축으로, 거기에 고용노동을 보완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농업 경영과 농가 세대의 존속·재생산을 도모했다.

10 谷本雅之, 『日本における在来的經濟發展と織物業: 市場形成と家族經濟』.

이상의 인식은 농가 내에서 노동력의 배출을 생각하는 데도 유익하다. 농상무성의 『직공사정』(職工事情)은 ‘임직을 하는 것이 공녀가 되어 오래 기속(羈束) 되는 것보다 이익이다’(1) ‘게다가 그 지역에서 기직공녀(機織工女)라 하면 일반적으로 비하되는 경향이 있다’(2)라고 보고하고 있다.¹¹ (1)처럼 구속이 적은 취업 형태가 선호되는 이유는 전술의 이해와 정합적이며 나아가 그것이 (2)에서 기술한 기직공녀에 대한 ‘비하’와 결부되는 것은 임직 취업을 선호하는 실태적인 기반이 농가 경영의 충실에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앞의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임직에는 약간의 대부지를 소유하고, ‘하녀’(女中)를 고용하는 자작농가도 종사하고 있었음에 반해, 직물공장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는 그 지역 사람으로서 공녀가 되는 자는 극빈자의 자녀에 한한다고 할 수 있다’¹² 라고 평하고 있다. 방적, 제사공장의 노동력이 소득수준이 낮은 영세농가를 공급원으로 했다는 것은 풍부한 사례와 함께 지적된 사실이다.¹³ 여성 노동의 비농림업 공급은 농가 세대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농가 세대가 외부 시장으로 여성가족을 배출했다. 타 세대로의 ‘여중봉공’(女中奉公, 가사사용인 취업)은 유력한 취업처였는데, 거기에 새롭게 더해진 것이 공장 노동이었다.

이것을 고용측인 공장통계를 통해 살펴보자. <표 4>에는 1909년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공장의 노동력 속성(성별, 연령)이 공장 규모별로 제시되어 있다. 80만 명의 공장노동자 중 여성은 과반수를 크게 웃도는 약 50만 명에 달했다. 또 그 과반은 직공 100명 이상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장에 취업해 있었고, 1,000명 이상 공장에서 노동자의 4분의 3은 여성이었다. ‘근대 부문’에서 노동력의 공급원으로서 여성 노동은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연소자의 구성비가 높다는 것도 특징적이었다. 방적, 제사공장의 여성 노동자의 태반이 20대 전반까지의 연령층에 집중해

11 『職工事情·上』, 岩波文庫版, 178쪽.

12 『職工事情·上』, 178쪽.

13 ハンター, ジャネット, 阿部武司・谷本雅之監訳, 『日本の工業化と女性労働: 戦前期の繊維産業』, 有斐閣, 2008.

〈표 4〉 민간공장에 있어서의 규모별·속성별 노동자 분포(1909년)

	직공수		남녀별 합계의 직공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여	남	여		남	
	합계(명)	합계(명)	20세 이상(%)	20세 미만(%)	20세 이상(%)	20세 미만(%)
직공 5명 이상 10명 미만	42,141	66,275	3.8	4.7	14.9	6.7
직공 10명 이상 30명 미만	87,727	82,548	7.5	10.3	19.5	7.4
직공 30명 이상 50명 미만	49,203	26,891	4.0	5.9	6.6	2.2
직공 50명 이상 100명 미만	68,558	29,399	5.6	8.3	7.2	2.4
직공 100명 이상 500명 미만	124,743	56,056	11.3	13.9	14.1	4.2
직공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40,384	15,433	3.6	4.6	3.7	1.3
직공 1000명 이상	80,742	30,537	6.2	10.2	7.8	2.1
계	493,498	307,139	42.1	57.9	73.7	26.3

출처: 農商務省農商務大臣官房統計課編, 『工場統計表』

주) 굵은 글씨는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규모별 카테고리

있었다는 점은 『직공사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표 4〉에서도 전 공장 여성 노동자의 약 58%가 20세 미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특징은 대규모 공장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즉, 공장 취업은 여성의 라이프 코스를 구성할 수 있는 한 요소이지만, 그곳에서의 취업 기간은 수년에 그쳤으며, 그 후 다취업(多就業)에 의해 소농 경영을 지탱하는 ‘아내’, ‘며느리’의 역할로의 회귀를 예정하는 것이 라이프 코스상의 현실적인 전망이었다. 제사업의 주요 공장에서 농번기 귀성과 결근이 빈출했다는 점¹⁴, 또 역직기화 이후 직물공장에서 종종 ‘가사사정’에 의해 여성의 출근율이 좌우되었다는 사례를 통해 공장 노동이 농가의 노동 수요와 단절된 형태로 인식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여성 노동의 경우 공장 취업도 농가 세대의 노동력 분배전략의 일환으로 자리잡혀있었다.

14 松村敏, 「大正中期諏訪製糸業における女工生活史の一断面」, 『商経論叢』 35卷2号, 1999.

15 佐木淳, 『アジアの工業化と日本: 機械織りの生産組織と労働』, 晃洋書房, 2006.

3) 남성 노동의 취업구조

이에 반해 남성 노동의 경우, 비농업 분야로의 취업은 출신 농가로부터의 이탈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거기에도 농가 경영 논리가 적용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의 <표 3>에서는 자작농 경영을 지탱하는 노동력으로서 남동생(24세)의 존재가 부각되었는데, 야마가타(山形)현의 쇼나이(庄内) 평야의 사례에서도, 10대부터 20대의 남성 노동력이 마경(馬耕)기술을 획득하고, ‘와카제’(若勢)로서 경기(耕起)노동에 근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의 대를 잇는 자(양자 포함)가 아닌 한, 이들 청년 남성 노동력이 농업 종사자로서 생애를 보내기란 어렵다. 그러나 농업 경영 측면에서 보면 10대 후반부터 20대 전반의 노동력이 농업 경영에 있어 이용 가치가 높은 노동력이다. 쇼나이 평야의 사례에서 20세 전후의 이촌(離村)패턴이 보이는 것은 농업 경영 사정과 비계승자층의 배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일정한 회답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이 농가 노동 배출의 논리에, 광산이나 토목건축, 교통업 등 남성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업종의 연령 구성이 조율하고 있다. 1903년 유력한 금속 및 석탄광산의 남성 광부의 경우 20대 이상이 85%를 넘었으며,¹⁷ 1908년 도쿄시의 국세조사에 준하는 조사 데이터(東京市役所編, 『東京市市勢調査原表』)에 따르면 토목건축, 교통업에서도 그 구성비가 각각 82, 89%(21세 이상)에 달했다. 중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이러한 취업 기회는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연소자의 입직이 어렵다는 면이 있어 20대에서의 입직은 노동수요측 사정과도 합치된다. 한편 비농업 부문 가운데 최대 수요처가 된 공업 부문의 연령 구성은 다양하다.

앞의 <표 4>에서는 남성 공장노동자의 20세 이상 구성비가 전체로는 약 74%로, 상기의 광산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업종에 따른 차이

16 豊原村研究会編, 『善治日誌: 山形県庄内平野における一農民の日誌・明治26~昭和9年』, 東京大学出版会, 1977.

17 大石嘉一郎, 「労働力群の構成」, 大石嘉一郎編, 『日本産業革命の研究: 確立期日本資本主義の再生産構造 下』, 東京大学出版会, 1975.

또한 컸다. 『직공사정』에 따르면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미숙련작업이 중심을 차지하는 시멘트 공장 노동자의 대부분이 2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반면, 유리공장에서는 20세 미만의 연소자 비율이 과반을 차지했다. 유리제조는 숙련된 ‘직인’적 노동자가 필요하여, 10대는 기능 양성의 기간이기도 했으며, 숙련을 획득한 노동자가 독립개업하여 공장 노동자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지향성이 강했다는 점은 『직공사정』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다(「硝子職工事情」, 「セメント職工事情」).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농가 남성이 비농업 부문의 노동력으로 공급될 때의 특징을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농가의 비후계자로, 20대에 이농하는 사람들의 이동처로 적합했던 직종은 도제적인 기능 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광산, 교통, 토목건설 등이었다. 한편 10대에서 입직이 요망되는 기능 형성이 필요한 업종은 노동 이동의 타이밍에서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경우 노동수요 측에 적합한 것은 비농업 부문 내에서의 노동력 이동이다. 그 극단적인 표출이 도시 내부에서의 공업 노동력의 공급이며, 실제로 전술한 1908년 『도쿄시 시세조사 원표』(東京市市勢調査原表)에 따르면 도쿄시 공업 취업자 가운데 직인적인 성격을 가지는 업종에서 도쿄 출생자 비율이 높았다. 공업 부문이 농가 남성 노동력의 취업처로서 반드시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외측에 학력을 매개한 사회이동 경로의 형성이 있었다. 중·고등교육에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는 1890년대 이래, 공무나 민간기업의 직원층(관료, 기술자, 사무원, 교원), 의사 등으로 취업하는 데 중등교육 이상으로 진학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된다. 가업의 계승자는 아니지만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상류층의 ‘이에’에서 자란 남성에게는 이 루트가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데 유력한 것이 된다.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도쿄시 재주의 관리나 공무·자유업의 도쿄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그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입신출세’로서 메이지 사회이동을 논할 때 종종 강조되는 현상은 이러한 사회이동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¹⁸

이 학력을 매개한 ‘입신출세’의 길은 객관적인 취업기회의 성격이란 측

면에서도 또 그것을 요구하는 주체의 주관적인 인식의 측면에서도, 소농사회 논리의 탈각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단 그 양적 비중은 중등교육으로의 진학률,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자 수만 봐도 제1차세계대전 전에는 작았다. 1910년경에도 동연령층 남자 가운데 중학교 진학자 비율은 대략 4~5% 정도다. 또 중등교육의 형태 자체가 다계통이며, 실업학교 (상업·공업)로의 진학에는 ‘입신출세’와는 다른 공업·상업에서의 자영 준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 점에서 ‘입신출세론’이 당시의 노동공급에 미친 실제적인 영향력은, 일부 계층—지주·상층 농가의 차남, 삼남 및 사족(士族)의 자제—에 한정되어 있었다.

농가 노동력을 초점에 맞춘 이상 검토는 노동 공급의 시점에서 복층적 경제발전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농가의 비농업 부문에 대한 노동 공급은 소농경영의 노동력 배분전략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세대 내 노동수요의 충족이 지향되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하층농가에 의해 이루어진 공장에 대한 노동공급도 세대 내 다취업으로의 회귀를 전망한 라이프 코스 속에 자리잡고 있다. 농가·농촌을 이탈하는 남성 노동력의 주된 취업처는 근대 공장을 공업화의 중핵으로 본다면 주변적인 취업기회에 그쳤다. 도시 주민이 공업 노동력의 중요한 공급원으로서 부상하지만, 도시는 독립개업에 의한 중소경영의 집적의 장도 되었다. ‘근대공장’의 발전은, 소농경영의 시장대응을 기축으로 하는 경제발전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소농경영에서의 노동 공급 논리를 전제로 한 대응을 보였던 것이다.

3. 장(場)으로서의 지역사회: 그 연속성과 자율성

1) 메이지 유신의 제도개혁과 무라(村)

조카마치(城下町)와 무라(村)에 의해 편성된 도쿠가와기의 경제공간에서 ‘무

18 竹内洋, 『立身出世主義:近代日本のロマンと欲望』, 日本放送出版協会, 1997.

라’는 그곳에 속하는 토지에 부과되는 연공 납입을 청부하는 행정조직이었다(村請制). 연공은 토지소지의 규모에 따라 개개 농민(소농경영)에게 부과되었지만, 매년 연공의 완납에 ‘무라’는 조직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 ‘무라’를 기반으로 하여 도쿠가와 시대 후기에 영역적인 공간으로서 ‘지역사회’가 생성된다.¹⁹ 그렇다면 메이지 유신의 변혁 속에서 이 ‘지역사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까?

메이지 4년 9월(1871년)의 대장성 지시에 의해 시작된 ‘지조개정’(地租改正)은 지가가 기재된 지권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책정지가의 3%를 지조로서 금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근대적’인 세제와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촉진한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명 지권소유자가 지조납입에 대한 유일한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은 연공 납입의 책임주체를 ‘무라’(村)로 하는 ‘촌청제’(村請制)의 철폐를 의미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적 소유를 강조하는 방향성은 근세 사회에 존재한 ‘총유’(總有)적인 토지에 대한 관여 형태에도 변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지와 달리 ‘입회지’(入會地)는 사적 토지 소유로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 경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강화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마이너스 영향을 받게 된 여러 계층으로부터의 비판이 잇따랐다.

지치부(秩父)사건(1884, 메이지 17년)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마스카타(松方)디플레이션(1881~1885)하에 자주 발생한 ‘부채소요’(負債騷擾)는 그것의 표출이었다. 새로이 제정된 토지에 관한 제법령에 근거하여 채무처리에서는 전통적인 채무 정산방식—유지(流地)—를 대신해서 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치안재판소의 개입에 의한 저당물건의 공매가 이루어지고, 지가하락이 더해져 파산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했다. 지치부 사건의 당사자를 포함한 ‘곤민당’(困民黨)의 요구—장기연부지불(長期年賦支拂), 제한이자, 저당지 반환—은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그대로 토지·재산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 강한 저항을 보였다. 저항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근거하고 있었

19 久留島浩, 『百姓と村の変質』, 『岩波講座・日本通史 15卷 近世5』, 岩波書店, 1995.

던 것이 근세 무라가 사적 소유권에 대해 부과한, 소농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약이었던 것이다.²⁰

분명 지치부사건 그 자체는 군대를 동원하여 제압되고, 토지를 기반으로 한 ‘무라’의 공적 규제력은 마찰을 빚으면서도 그 자체로서 되살아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사적 토지소유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항하는 논리는 에컨대 사적계약으로 설정되는 지주-소작 관계에서 소유권과 경작권의 대항으로서 농촌사회에 내재하게 된다. 소농경영의 생존에 밀접히 관계된 입회 관행도 용이하게 부정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무라’를 뛰어넘는 ‘지역 사회’ 논리가 형성되고 있었던 막말기에, 구성단위로서 ‘무라’의 약화는 새로운 지역구성단위와 그곳에서 사회편성원리가 출현하는 기회가 된다. 메이지 전기의 지방자치제도 구축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그 과정을 체현하는 것이었다. 폐번치현 후 1872년(메이지 5년) 4월, 유신정부는 쇼야(庄屋), 나누시(名主), 도시요리(年寄), 오쇼야(大庄屋)의 호칭을 폐지하고, 정촌 몇 개 규모로 소구(小區), 군 규모로 대구(大區)를 설치하는 이른바 대구·소구제라 불리는 새로운 지방제도를 설정했다. 언뜻 보아 근세 이래의 무라와 무라의 관리자(村役人)가 부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능에서는 근세 후기에 전개되는 중간기구로서의 조합무라, 군중(郡中)과의 계승성이 강했다.²¹ 그 후 몇 번의 제도개혁을 거쳐 근대 일본 지방자치제의 기본 틀이 되는 시제·정촌제가 시행된 것은 1889년(메이지 22년)의 일이다. 구정촌 합병에 의한 시정촌 규모의 확대를 전제로 하여 시정촌에 행정구역의 지위를 부여하는 이 개혁에서는 시정촌이 명확하게 공법 인격을 가지는 ‘자치단체’로 설정되었으며, 또한 정촌장이 무급의 명예직이며 시정촌 의원의 선거는 납세액에 의한 표 가치의 차를 설정한 등급선거제에 따라 집행되도록 정해져있었다. 지방자치를 자산과 교양을 지닌 ‘명망가’에 맡기는 것을 상징하는 ‘명예직 자치제’의 제도적 표현이 여기에 되어 있다. 무급의 대가로서 수당 지급이 이

20 鶴巻孝雄, 『近代化と伝統的民衆世界: 転換期の民衆運動とその思想』, 東京大学出版会, 1992.

21 奥村弘, 「三新法体制の歴史的位罫: 国家の地域編成をめぐって」, 『日本史研究』 290号, 1986.

루어지는 등, 이 명예직제가 반드시 이념대로 운용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은 종종 지적되고 있다.²²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시정촌 행정의 장이나 또는 부현회의원으로 공공적인 영역에서 활약하는 담당자로서 등장했음은 명백했다. 그 계보는 근세 후기에 성장하는 유력농민—‘호농’(豪農)—에서 찾을 수 있다.

연공납입에 촌민의 연대책임이 부과된 촌청제하에, 무라의 유력자였던 호농은 자신의 농업·사업 경영에 힘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무라 내의 소농 경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존재가 된다.²³ 그 활동 범위는 근세 후기에 무라의 연합조직인 조합무라나 ‘군중’으로 지리적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갔고, 유신기의 제도 개혁은 그 활동 영역의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메이지 10년대(1870년 후반에서 80년대 전반)에 호농층의 자유민권운동 관여는 정치활동면에서 이를 극단적으로 표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호농민권), 지역 내 공공적인 활동 영역(교육·위생·권업·사회자본정비(도로·치수) 등)의 확대가 보인 것도 메이지 초년대에서 10년대의 특징이었다. 자유민권운동에서 지방자치의 요구는 활동 영역에서의 상대적 자율성 확보를 지향하는 운동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은 지방제도의 변혁 과정에서 부·현의 자립화, 정촌의 공공단체화로서 일정 정도 실현되어 간다. 한편 시장경제화하의 계층분화는 호수할(戶數割)[민비(民費)·부현세(府県税)·시정촌세(市町村税)·협의비(協議費) 등의 부과 방법의 하나로 호수를 기준으로 했다. 단 통상 각호 균등은 아니며 시정촌 내에서 가격(家格)·빈부 등에 의해 등급을 정해 등급별로 부과했다—역자주]의 등급제도 도입(등급에 의한 부담금액 차이)이나 학교건설 등에 대한 기부 행위를 통해 지역사회 운영에 있어 부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초래했다. 그 부담을 견디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고유의 지위—명망—가 부여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운영시스템이 될 수 있다.²⁴ ‘유산자질서’(有産者秩序)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사회편성의 원

22 石川一三夫, 『近代日本の名望家と自治: 名誉職制度の法社会史的研究』, 木鐸社, 1987.

23 渡辺尚志, 『近世村落の特質と展開』, 校倉書房, 1998.

24 奥村弘, 「近代日本形成期の地域構造: 地域社会の変容と地方制度改革をめぐって」, 『日本史研究』

리가 메이지 20년대 초두에 정착한 근대 일본지역사회의 특질이었다.

2) 지방재정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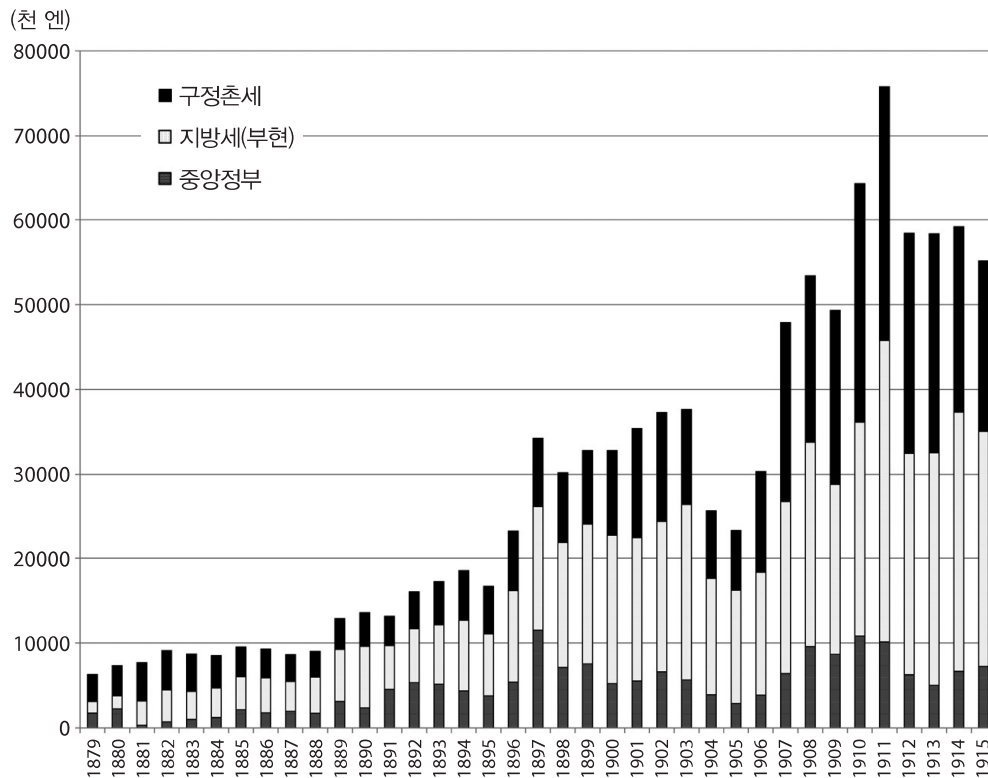
‘지역사회’의 자율성은 재정제도의 측면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분명 부현·군의 수장은 관선이었으며 시정촌에서도 호적이나 병사(兵事) 등의 기관위임사무는 감독관청 명령에 따르는 것이 의무시 되어있다. 그러나 메이지기에는 지방자치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적 급부가 적었다.²⁵ 그것은 지방자치체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의 근거로도 될 수 있었다. 지출과 부담의 관계가 지방자치체 내부에서 완결된다면, 그 재정운영은 주민의 이해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가 높아질 것이 상정되기 때문이다.

일반회계지출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체(부현, 군, 시정촌, 수리조합)의 구성비는 18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중앙 2 지방 1로 추이했다.²⁶ 한편, 중앙 정부의 지출 내용에는 청·일전쟁 후에 군사비 비율이 급증하여 최대 정부 지출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국채비의 비율이 가장 커져 정부 일반회계지출이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군사비와 국채비를 제외한 정부행정비 가운데 지방 정부의 비율은 청·일전쟁 후기에는 약 50%로 중앙 정부와 거의 같은 규모였고, 1890년대 전반과 러·일전쟁 후기에는 오히려 지방자치체의 지출 쪽이 많았다. 지방 정부의 지출 항목 가운데 큰 것은 토목비와 교육비로, 양자 합해서 지방 세출의 거의 40~50%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합계액은 <그림 1>,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지방 정부의 토목비가 중앙 정부를 포함한 지출비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연차도 많으며, 지방 정부의 교육비도 1880년대 초두 이래 일관되게 전체 교육비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18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인프라 정비, 교육확충을 주로 담당한 것이 지방재정이었음은 명백했다.

295号,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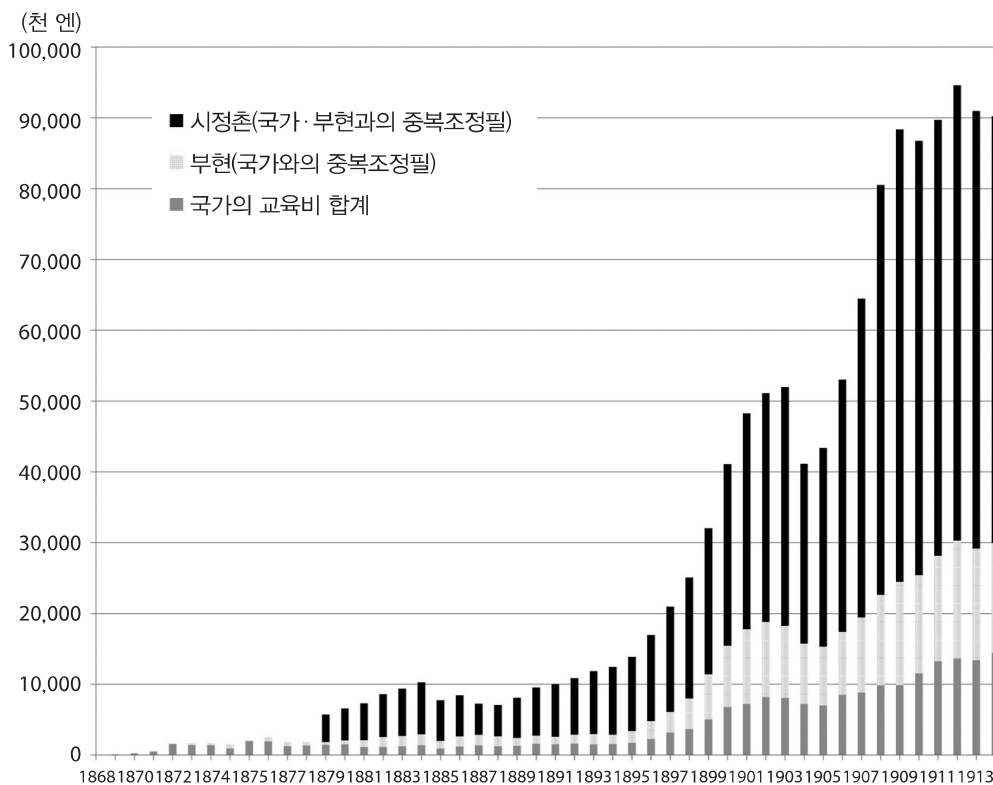
25 金澤史男, 『自治と分権の歴史的文脈』, 青木書店, 2010.

26 江見康一·塩野谷祐一, 『長期経済統計7 財政支出』, 東洋経済新報社, 1966.



〈그림 1〉 토목비의 부담

출처: 『帝國統計年鑑』을 참고로 작성



〈그림 2〉 교육비의 부담

출처: 江見・塩野谷(1966) 第12表, 196~201쪽을 참고로 작성

그렇다면 지방자치체는 왜 이들 재정지출을 수행·확대하여 그 부담을 용인했던 것일까? 메이지 초년대에서 1890년대 초두의 초기 의회까지 토목, 교육, 권업비를 둘러싸고 부현 지사와 부현회는 종종 대립했다. 후쿠시마(福島)현회가, 미시마 미치쓰네(三島通庸) 지사가 주도하는 산포(三方)도로 개척사업에 대한 민당계 의원 반대운동의 장이 되었던 것은, 자유민권운동사의 문맥에서도 저명한 사실이다. 1880년대 중엽의 디플레이션과도 맞물려 부담 증대를 기피하는 지방주민, 특히 담세자인 지주층의 반발에 의해 부현회의 초점은 오히려 예산 감액에 있었다.

그러나 1880년대 후반이 되자 양상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예컨대 앞의 후쿠시마현의 도로개척이 후쿠시마(福島) 사건 후 곧 현지 요청으로 재개·완성되었듯이, 도로정비의 진전은 각 부현의 토목비 지출을 점차 증대시켰다. 야마나시(山梨)현에서는 재해복구·하천 개수안이 부현회에서 인정되었고, 나아가 현도(縣道)의 개수, 이도(里道)의 현도 편입, 철도와 촌락을 잇는 ‘정차장 도로’의 현비처리, 보조를 요망하는 목소리가 부현회에 북적이게 되었다. 부현립 학교 무용론에 입각한 교육비 지출에 대한 저항도 90년대에는 상황이 달라져, 청·일전쟁 후에는 부현립 중등학교 신설의 요구가 일반화되어간다. 토목비·교육비는 1890년대에 삭감대상에서 증액 요구 대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부현회는 사업 실시의 가부, 규모를 둘러싸고 부현 당국과 부현회의원, 내지는 지역이해를 배경으로 한 부현회 의원 상호간의 논쟁장이 되었다.²⁷

교육비 지출로 지방재정 지출 총액의 60~70%를 부담했던 시정촌의 재정행동을 살펴보자. 나가노(長野)현 고카(五加)촌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학사(學事)는 촌의 예산에서 1890년대 이른 시기부터 지출 증대에 대한 찬성을 얻을 수 있었던 항목이었다. 그 배경으로 취학독촉도 맞물려 취학률이 상승하고, 취학을 당연시하는 사고가 촌내에서 양성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촌내의 기대는 1897년 고등과를 설치하고,

27 有泉貞夫, 『明治政治史の基礎課程: 地方政治状況史論』, 吉川弘文館, 1980.

1902년 소학교에 실업보습학교를 병설한 데서도 나타난다. 히지카타 소노코(土方苑子)는, 초등교육 후의 촌의 교육 욕구에는, 중등학교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학을 전망하는 이른바 ‘입신출세’ 루트 참가와 함께 행정촌의 지도층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업 지식이나 견식의 획득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⁸ 촌내 최상층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무연한 ‘입신출세’와는 별도로, 촌내에 체류하는 더 넓은 계층에서 교육 가치의 내면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교육비 지출 증대의 기동력이 될 수 있었다 하겠다. 교육비 지출 증대의 기저에는 정촌 행정의 능동적인 대응이 깔려있었다.

3) 담당자로서의 자산가 · 명망가

이처럼 지방자치체의 재정행동에는 지출 증대 지향성이 1890년대 초부터 싹터왔다. 그것은 감세와 긴축재정에 따른 ‘민력휴양’을 외치던 제국의회에서 민당의 주장과 다른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것에 자치체 구성원의 직접적인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메이지 정부의 부국강병 노선과도 그 태생을 달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지지한 것은 ‘지역’의 자산가층이었다. 지방재정이 고유의 재자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로 간접세인 주세, 소비세 비율을 급속히 높여가는 중앙재정과는 대조적으로 부현은 일관하여 지조부가세가 4~5할로 가장 비중이 크고, 정촌에서는 호수할(戸数割)이 조세수입의 6~7할을 차지했다.

직접 세대를 단위로 부과되는 호수할은 무산자에게까지 부과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대중과세성과 역진성이 지적되는 일도 많지만, 자산을 반영한 ‘평가’(見立て)에 의해 개인 세대가 등급화되는 것이 통례로, 등급에 따른 일호당 부과액은 각각의 지방자치체 내에서도 큰 격차가 있었다. 예컨대 후쿠시마(福島)(현 가와마타초, 川俣町)의 사례에서는 정내의 전호 평균으로 산출한 1호당 호수할 부담액에 대해, 5배 이상을 지불하는 ‘상층’이 전부과액의 약 50%를 부담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20배 이상 부담하는 ‘최상층’의 지

28 土方苑子, 『近代日本の学校と地域社会: 村の子供はどう生きたか』, 東京大学出版会, 1994.

불액이 1900년대를 통해 호수할 총액의 약 20%에서 25%로 상승했다.²⁹ 토지소유 규모에 비례하는 지조부가세와 함께 자산가층의 납세액이 지방세 총액에 대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재정의 기반은 사실상 자산가의 납세능력에 의존하는 면이 컸던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자산가층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1980~90년대의 자치체사 편찬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료조사를 바탕으로 비교적 풍부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에도사키마치(江戸崎町)사 편찬사업 과정에서 조사가 진행된 세키구치 하치베(関口八兵衛)가도 그 일례다. 세키구치는 근세 중기 이래 간장 양조업으로 자산을 축적하여, 메이지 초년경에는 양조고가 2,000여석에 달한 유력 양조가로 이바라키(茨城)현에서는 열손가락에 꼽히는 자산가였다. 12대 당주 세키구치 하치베는, 1880년대에 들어와 가업인 간장 양조로 외국 수출과 내외의 박람회(박람회)에 적극적인 출품활동(내국권업박람회와 파리만국박람회에 출품)을 펼쳤고 그와 동시에 맥주와 소스, 벽돌의 제조를 비롯하여 가스미가우라(霞ヶ浦) 수운을 이용하는 가와세회조회사(為替回漕会社)도 설립했다. 주주·출자자로서, 도네(利根)운하회사 등에도 출자했다. 한편 사회적,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는데, 전대의 11대 하치베가 하토자키(鳩崎) 학교의 간사(世話役)를 맡았으며, 12대 하치베는 1881년 하토자키(鳩崎)·후토(古渡)·사쿠라무라(佐倉村)의 연합 호장(戸長)에 취임하고, 나아가 학무위원도 겸하게 되었다. 1883년에는 하토자키 초등학교 건축에 즈음하여 부지 1단(10아르)과 500엔을 기부했다. 나아가 당주 하치베는 개진당에 입당하고, 1889년에 에도사키(江戸崎)를 중심으로 창간된 개진당계의 『조소잡지』(常総雑誌)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리고 1890년 제1회 중의원위원 선거에 출마하여 이바라키(茨城) 6구의 유일한 의원으로 선출되었다.³⁰

29 山内太, 「日露戦後期における地域振興策とその性格: 福島県伊達郡川俣町を事例として」, 『土地制度史学』 37卷3号, 1995.

30 谷本雅之, 竹内常善·阿部武司·沢井実編, 「関口八兵衛・直太郎: 醤油醸造と地方企業家・名望家」, 『近代日本における企業家の諸系譜』, 大阪大学出版会, 1996.

이러한 지역 자산가의 투자행동이 메이지기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주식회사 설립운동을 저변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이었다. 1901년에 니가타(新潟) 신문사에 의해 간행된 『도미노에치고』(富之越後)는 1900년의 니가타(新潟)현하의 주요 자산가 250여 명에 대해 각각의 주식소유 내역을 게재하고 있어, 개개인의 주식투자 패턴이 판명된다. 소유주식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중앙 대기업³¹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투자의 중심인 투자가와 특정기업으로 주식소유를 집중시키고 동시에 당해기업 총주식 중의 소유 주식 비중이 큰 투자가라는 두 가지 패턴이 일단 눈에 띄는데, 전자를 렌트너(Rentner, 자산운용)적, 후자를 기업가적 투자행동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지역기업(여기서는 고향인 니가타 지방에 입지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로서는, 먼저 이 기업가적 투자가의 존재가 중요해진다.

그런데 그에 더하여 특정 니가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의 실제 경영활동에 관여하는 정도는 약하고, 기업측으로부터 본다면 사업을 자금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주(金主)=후원자’적 투자가가 기업의 소재지와 같은 군 또는 인접한 군에 존재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 유형의 투자행동을 보이는 자산가는 수적으로 60%를 차지하여 가장 높으며, 금액 기반으로도 전체의 31%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³² ‘지역’에서의 이해 공유를 기반으로, 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자산가층의 투자행동에 의해, 기업 발흥의 지역적인 확산이 지탱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상술한 세키구치(関口)가에 나타난 자산가상과 통하는 인물이 반드시 빠지지 않았다. 전술한 ‘자본주=후원자’의 유형에 포함되는 마쓰다 슈헤이(松田周平, 新潟県古志郡)는 호덴(宝田)석유의 임원으로 취임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창업자인 야마다 마타시치(山田又七)가, 마쓰다의 ‘명망가’로서의 명성에, 기업의 사회적 신용의 획득을 기대한 것에

31 여기서는 일본(日本), 규슈(九州), 산요(山陽), 간사이(関西), 홋카이도(北海道) 탄광의 간선철도회사와 닛폰유센(日本郵船) 주식을 가리킨다.

32 谷本雅之, 「日本における“地域工業化”と投資活動: 企業勃興期-地方資産家の行動をめぐって」, 『社会経済史学』第64巻第1号, 1998.

따른 판단이었다. 실제로 마쓰다 슈헤이는 지역의 진흥을 내걸고 1880년에 결성된 세이시사(誠之社)의 창립위원이기도 하며, 사회적인 활동과 기업투자의 관련성이 엮여있다.

사회적 활동을 이끄는 자가 경제적으로 자산가의 지위에 있는 것은 통례일 것이다. ‘지배’ 유형 중 하나로 ‘명망가 지배’를 논한 막스 베버는 ‘명망가’의 요건으로서 경제적 지위를 갖추고 동시에 ‘여가가 있을 것’을 꼽았는데, ‘이 여가를 최고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온갖 종류의 렌트너’ 즉, 이자생활자라고 했다.³³ 이 경우 경제적 활동은 ‘명망가’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기 자산가는 앞서 이야기했듯 렌트너와는 구별될 수 있는 투자 행동을 행하는 자산가 유형이며, 사업활동과 정치적·사회적 활동은 반드시 준별된 두 가지 영역은 아니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새로운 지식·기회’로 사업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기업가이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명망가라 한다면, 앞에서 예시한 메이지기의 자산가에게는 기업가·명망가 쌍방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경우 기업가적 자산가, 명망가적 자산가의 두 종류가 현재화하게 된다. 렌트너보다 리스크 내성(耐性)이 높은 이들 자산가 유형의 존재가 지역의 기업발흥을 담당하고 또 지역 재정을 지탱했던 것이다.

그것은 ‘유산자 질서’라 부를 수 있는, 근세 후기 이래의 ‘지역사회’가 달성한 사회편성 원리가 새로운 경제발전 시동에 즈음하여 보여 준 대응의 형태였다. 막말이래 지역사회의 출현은 세키구치가나 마쓰다 등 니가타 자산가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메이지정부에 의한 중앙집권화 정책은 그러한 ‘지역사회’를 상호 비교 가능한 평준화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이나 지역 이해를 공공연히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했다. 거기에 유신 이후의 새로운 경제기회의 출현과 경제변동이 더해져 ‘지역사회’는 ‘지역경제’를 ‘지역사회’ 간 경쟁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의식하기

33 ウェーバー, マックス, 世良晃志郎訳, 『支配の諸類型』, 創文社, 1970, 189쪽. 렌트너는 독일어 Rentner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것.

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지역사회의 중요사항이 되었을 때, 지역 경제로의 관여가 그때까지의 이해조정과 빈민구제책 등의 기능 외에 명망 획득의 영역으로서 출현한다. 그것이 지역 재주 자산가에게 지방재정을 떠맡고 기업설립 리스크를 부담하며 지역부흥을 창도하는 동기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산가는 ‘지역사회’의 논리를 매개함으로써 1880년대 후반 이래 경제발전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거기에 일본의 경제발전이 가지는 복층적 특질의 한 국면이 나타난다.

6. 맺음말

일본경제는 18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성장을 개시했다. 개항 및 메이지유신이라는 큰 제도개혁이 선진적인 산업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정부 및 민간 여러 주체의 노력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기업의 발흥과 성장을 실현했다. 이것을 ‘경제근대화’의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그 궤적은 에도시대 이래의 경제발전의 트렌드—재래적 경제발전—에서는 크게 이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주목했듯이, 재래적 경제발전은 이식사업을 포함한 일본의 경제발전 총체에 규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농가에서 비농업부문으로의 노동 공급은 소농 경영의 노동력 배분전략에 근거하고 있으며 ‘근대공장’도 거기에서는 ‘주변’적 고용기회의 위치 밖에 차지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그것이 ‘중핵’을 재생산함에서 보완물로서 기능하는 한 소농 경영 논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또, 재래적 경제발전 속에서 자본을 축적한 각지의 자산가가 기업가·명망가로서 기업 리스크를 부담하고 자본규합형 기업의 발흥을 뒷받침했다는 사실은, 근세 이래의 ‘자율적’인 지역사회가 자본공급의 장이 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지역사회는 사회적인 인프라 정비(토목·교육)의 담당자이기도 했다. ‘근대공장’은 반드시 소농사회를 편성하는 주체였던 것은 아니며, 자본시장의 렌트너의 논리만으로는 ‘산업혁명’을 위한 자본공급에

는 한계가 있었다. ‘근대적’ 기업의 발흥도 ‘재래적’ 지역사회의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면이 컸던 것이다. 중앙집권적 메이지 정부 하에 실제 민정의 큰 부분은 재정적으로 ‘자율적’이었던 지역사회가 담당했다. 재래적 경제발전은 소농 경영과 지방자산가의 재생산을 지탱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산업혁명의 모습에도 그리고 시장경제 밖에 위치하는 ‘공적’인 활동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근대 일본경제의 특질은 이와 같은 경제발전의 ‘복층성’에 기인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적인 발전의 논리를 포함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봉건성’의 잔존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서구형 ‘근대’의 일방적인 이식·침투 과정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소농사회’를 기초로 하는 복층적인 경제발전은 1920년대 이후 공업발전이 심화해 가는 중에도 대기업의 형성과 병행하는, 도시 중소기업의 족생과 집적으로 전개해 간다. 일본의 공업화는 대기업 부문만이 견인차였던 것은 아니며, 공업 노동력의 큰 부분은 도시중소공업·소경영부문으로 흡수되었다. 그것이 전간기 이후 농업 부문이 축소하는 가운데에도 일본의 자영업 취업률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했다. 이 비농업 부문을 포함한 자영업 취업자의 두터운 존재가 20세기 후반까지 일본경제의 모습을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기능한 것이다.³⁴

34 이 점의 전망에 대해서는 Tanimoto, “From peasant economy to urban agglomeration: the transformation of ‘labour-intensive industrialization’ in modern Japan,” Austin, Gareth and Kaoru Sugihara eds, *Labour-intensive Industrialization in Global History*, Routledge, 2013과 谷本雅之, 「在来的經濟發展論の射程: 『在来』『近代』の二元論を超えて」, 武賢一朗·太田光俊·木下光生編, 『日本史学のフロンティア1: 歴史の時空を問い直す』, 法政大学出版局, 2015 참조.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정진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일본경제사)이 번역했다.